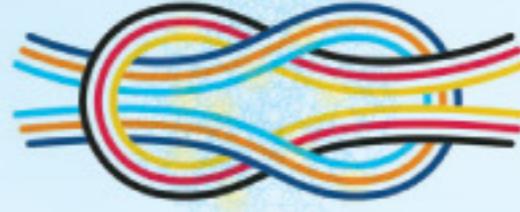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라!



2017년 5월 2일부터 3일 독일 베를린, 통일의 상징 중 하나인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Gate) 가까이에 있는 벤프드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천여 명의 경제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G20(Group of 20) 국가의 7백 명이 넘는 기업과 경제계 대표들이 7개월에 걸쳐 공동 작업한 결과물인 B20(Business 20)¹⁰ 정책 제안서를 2017년 G20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참여하는 첫 다자외교 무대였던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¹¹ 주제의 키워드는 복원력(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이었다. 필자는 중국이 G20 의장국이었던 2016년부터 B20 테스크포스 멤버로 활동했는데, G20 주제 중 두 가지가 관련된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터라, 올해 B20 멤버 활동¹²은 더욱 의미가 깊었다.

지속가능경영과 CSR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사회적 책임(Global Social Responsibility)을 인식하고 동참하여야 하고, 둘째, 정부가 국가의 사회적 책임(Country Social Responsibility)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셋째,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책임의식을 조금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금 세계는 글로벌 사회적 책임(Global Social Responsibility)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로 변화와 진통이 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이 넘겨준 국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였고,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청정에너지 기술로의 이행을 함께 주도하기로 하였다. 즉, 자구에 대한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실망한 미국인들에게 프랑스가 제2의 고향이 되겠 다며 공개 초대를 하는 등 반 이민정책과 탈 기후변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의 주요 리더인 독일은 올해 11월 본에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를 개최한다. 2017년 G20 의장국으로서 내세운 복원력(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책임성(Responsibility) 등 이 세 가지 분야 중 기후변화와 에너지 주제는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12월 온실 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복원력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책임성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성

Country Social Responsibility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시대 선언은 신재생 및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한 청정 에너지 시대로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의 녹색경제 시대에서 한국이 신정부 출범을 맞아 기후변화에 있어서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 인식과 동참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계는 물론 금융계⁴에서도 지속가능경영 및 녹색경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는 환경분야뿐만이 아니다. 2015년부터 전 세계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93개 정상들이 합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분야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과제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게도 글로벌 사회적 책임 이행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1월 11일, 자발적 이행 검토를 최초로 유엔에 신고한 전 세계 10개국 그룹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⁵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어젠더에 대한 글로벌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능동적·제극적 동참은 당연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어젠더를 발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신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Country Social Responsibility)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분야로는 기업과 인권 분야와 양성평등 분야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인권 분야를 살펴 보자. 2017년 6월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2008년과 2011년⁶ 각각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The UN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nd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⁷에 기반한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으로 인해 본국과 전출국 정부, 다국적 기업, 시민사회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심화되자 2005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과 스쿨의 존 러기 교수를 기업과 인권에 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로 지정하여 상황을 교통정리하고 혜법을 찾는 역할을 맡겼다.

존 러기 특별대표는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6년간 작업한 결과,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Duty to Protect)'가 있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Responsibility to Respect)'이 있으며,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 주체들은 인권 피해자를 위한 고충처리 구제책(Grievance Mechanism)이 접근

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유엔 기업과 인권 정책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을 수립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유엔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게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다자간 이해관계자 대화 장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취임 관련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⁸ 중의 하나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NAP 수립을 비롯한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를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 부처에 권고 수용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13개국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NAP를 이미 발표하였고, 아시아에서도 미얀마와 인도네시아가 수립 중에 있는 만큼⁹ 한국에서의 발전 방향도 기대해 볼 만하다.

다음은 양성평등 분야이다. 필자는 독일 외교부 국제개발 협력기구인 EMSD(Emerging Market Sustainability Dialogues)의 주천으로 G20의 여성계 정책제안 그룹인 W20(Women 20)¹⁰의 한국 참가자로 2017년 4월 24일부터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W20 서밋에 참석하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 미국 이방카 트럼프 등 국제 사회의 대표 여성 리더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는데, 하이라이트는 G20개국의 W20 참가자들이 4개월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인 W20 정책 제안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정책 제안서와 실행 계획¹¹에는 노동시장, 금융, 디지털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필자는 생각하기에는 이를 실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필요한 제안은 2025년까지 여성 노동 및 경제 참여율을 25% 향상시키는 것으로, 각국이 국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OECD와 ILO가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결국 실행에 대한 고려와 판단과 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은 각국의 몫일 것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이 30%인 여성 친화 내각을 목표로 하였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비전통적인 부처 장관에 여성성이 입각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6년 전체 26위 순위에 비해,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90위로 하위권이다.¹² 시장이 반이기에 신정부 출범 이후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궁극적이고 폭넓은 인식 확대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능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노동, 인권,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평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나 사업 리스크로 확대되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먼저 살펴 보자. 2017년 3월 세계적인 사회책임투자 기관인 아비바(AVIVA), 칼버트(Calvert), 아이리스(Eiris) 등은 기업과 인권 연구센터와 인권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여 전 세계 의류, 농업, 체굴산업 분야 유명 기업 98개를 평가한 기업인권 벤치마킹(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결과¹³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은 평가 대상에 없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한국 벤더기업이 벌주를 받는 주요 외국 바이어기업들이 평가 대상에 속해 있고, 특히 평가 결과가 낮은 기업은¹⁴ 앞으로 글로벌 금융당국에서 벤더기업에 대한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벌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것인가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실태 항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로 벤더기업인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CSR 역량 강화 지원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평가 기관의 질문

에 지속적으로 답하고 커뮤니케이션한 기업들은 따로 모아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무조건 노동, 인권 쪽 분야 기관은 기파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기관이 접촉을 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CSR 분야의 평가는 보통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하므로, 적극적인 연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좀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법은 기업과 인권 분야는 물론, 반부패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필자는 활동한 2017 B20 독일의 책임기업판행과 반부패 교차 주제 그룹의 G20 대상 정책제안서¹⁵는 수의적 소유권의 투명화,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 증진과 인정, 인프라 산업에서의 책임성 증진의 세 가지 제안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 증진과 인정에서는 기업 부파나 뇌물에 대한 사실을 기업 준법윤리경영 내부통제 부서에서 사전에 발견하였을 때 사정기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해 주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안이 담겨 있다. 이는 전 세계를 두루遍及하는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반부패에 100% 완벽한 기업은 없다는 진제에 기반하며,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때 자정 작용과, 자진신고를 위해 해당 부서의 사정기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가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환경, 여성, 노동, 인권, 반부패 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가 글로벌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동참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막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면서 상호협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 빠르게 변해가는 지속가능경영과 CSR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자, 빠른 추격자, 방관자 중 어느 쪽이 될 것인가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각주

1. 2017 B20 독일 웹 사이트 <https://www.b20germany.org>.
2. 2017 G20 독일 웹 사이트 https://www.g20.org/Web/G20/EN/Home/home_node.html.
3. 필자는 2017 B20 독일의 글로벌상장과 인프라 테스크포스 그룹 멤버와 책임기업 판행과 반부패 교차주제 그룹 멤버로 활동하였다.
4. 대구은행은 2006년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부터 원스토어를 감독 종합계열인 DGB STOP CO. 플랫폼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출, 펀드, 카드 상품 등 환경 관련 금융상품들을 취급하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 인증제 기관 환경 분야 혁신 플랫폼인 DGB 사이버그린지원장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성과로 2015년 환경정보공개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금융세미나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5. <http://oig.kid.or.kr/news/en/countries/volunteer-for-national-reviews-at-fip-2016>.
6. 경희대학교 외교부 장관은 2011년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였다.
7. <http://business-humanrights.org/en/un-secretary-generals-specialRepresentative-on-business-human-rights>.
8. <https://www.un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menuid=00100402001&pageidx=10&boardtype=24&boardid=7601037>.
9.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 2015. p.14.
10. 2017 W20 독일 웹 사이트 <http://www.w20-germany.org>.
11. <http://www.w20-germany.org/the-w20/documents/>.
12. <http://www.asiatoday.co.kr/news.php?key=2016092800112136>.
13. https://www.corporatebenchmark.org/?token=XwCnxDQd7za_UyN3mKdPM9d4_C23PF1DXQRV&webform_id=welcome.
14. 평가 결과를 배경으로 환산하여 공개된 결과에서 아디아스는 50-59% 그룹에, 나이키는 40-49% 그룹에, 노르스터 백화점은 20-29% 그룹에, 월마트는 10-19% 그룹에 속했다.
15. https://www.b20germany.org/admin/user_upload/documents/B20/b20-dgtaic-policy-paper.pdf.



글_안겔라 강주현(시민법민 글로벌경영정책포럼 설립자 겸 상임대표)